

**‘지역언론 토크아보기’ 로  
돌아본 지역언론 보도 평가  
간/담/회**

-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4시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
- 주최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행사 개요

사회 :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발표 2020-2021 '지역언론 톺아보기'에 담긴 지역언론 초상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문미진 모니터팀장

토 론

노동 보도 -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본부부장

정치 보도 - 김동윤 진보당 중앙위원

시정·의정 보도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역언론이 외면한 이슈 - 이상기 부경대 신방과 교수

자 유 토 론

# 2020-2021 지역언론통아보기에 담긴 지역언론 초상

문미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 1. 감시견에 대한 감시견으로써의 미디어 비평

흔히 언론을 권력에 대한 감시견(watch dog)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감시견인 지역언론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미디어비평이 저널리즘의 주요 영역 중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있지만, 부산 지역언론에서 매체 간 상호비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신문은 2021년부터 ‘옴부즈맨 칼럼’ 코너를 폐지했고, 부산일보는 ‘미디어 비평 칼럼 란’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도 영역보다는 언론 제도, 미디어 이슈 등에 국한돼 있다. 일상적으로 매체 간 비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언론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는 기사화하지 않는다. 사실상 언론이 언론에 대한 감시견 역할은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2021년 9월 5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를 통해 부산일보 사장과 건설사 대표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지역언론의 1차 반응은 침묵이었으며, 2차 반응은 피상적 보도였다. 이는 지역언론이 서로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언론학계에서도 지역언론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일상적 보도에 대해 이뤄지진 않는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매체비평지도 지역언론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하진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통아보기’는 지역언론이라는 감시견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2. 지역언론통아보기 소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0년 ‘지역언론통아보기’를 공식 사업화 해,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모니터 보

고서를 발행해 왔다. 지역언론 5개사(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의 주요 기사나 보도 관점을 비평하는 ‘저널리즘 비평’을 상시적으로 해왔다. 작성한 보고서는 홈페이지 업로드를 기반으로 페이스북과 이메일, 오마이뉴스, 유튜브, 부산MBC 라디오 ‘자갈치 아지매’ 등을 통해 확산했다.

2020년부터 시행한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분기별 좋은 보도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이어온 ‘부산민주언론상’과 함께 지역의 좋은 보도를 독려하기 위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언론도 수상 소식을 기사화 하는 등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 페이스북, 오마이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갈무리



△ 2021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작 기사 갈무리

### 3. 2020-2021년 지역언론투아보기로 돌아 보는 지역언론 초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총 102건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비평의 성격은 크게 칭찬/비판으로 나뉘었다. 102건의 보고서 중 칭찬 비평 40건, 비판 비평 62건이었다. 4:6의 비율로, 비판 비평의 비중이 컸다.

102건의 보고서를 칭찬, 비판으로 나누고 비평의 대상이 된 보도 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비평의 근거를 살펴봤다. 보도 분야는 크게 사회, 정치, 경제, 언론·미디어로 나뉘었다. 사회 분야는 재난·환경·역사·노동으로, 정치 분야는 선거·행정으로, 경제 분야는 개발·부동산 등으로 세분화했다.

칭찬 비평 분야는 사회>정치>경제>언론·미디어 순이었으며, 비판 비평 분야는 정치>사회>경제>언론·미디어 순이었다.



### 3.1 칭찬 비평 : 사회 분야 26건, 이 중 노동은 3건

칭찬 비평 대상이 된 보도들의 분야를 살펴봤다. 전체 40건의 보고서 중 사회 분야에 대한 칭찬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 10건, 경제 3건, 언론·미디어가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언론사 별로 살펴보면, 국제신문이 10건, 부산일보 6건, KBS부산10건, 부산MBC 12건 KNN 10건이었다.

가장 많은 칭찬 비평은 사회 분야에서 이뤄졌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재난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 재해가 이어졌던 탓에, 재난약자 피해에 주목하고 제도적 허점 등을 짚은 보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부산의 산과 바다, 강, 공원 등의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보도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분야에서 노동 의제 관련 보고서는 3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2건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칭찬 비평이어서 사실상 2020-2021지역언론의 보도에서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지역언론의 좋은 보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보도들은 대부분 예산을 점검한 경우였다. 10건 중 8건이 부산 시의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점검 보도였고, 이외 국회의원 약속 점검 1건, 공직자 부동산 투자 실태 점검 1건이 있었다. 전봉민 의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 하면, 정치분야의 좋은 보도가 예산점검에 국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제분야에서 좋은 보도는 KBS부산의 해운대 난개발 감시 보도와 국제신문의 전통시장과 O2O 연계 보도였다. 언론·미디어 1건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편이었다.

영역	매체	보고서 제목	
사회	재난	부산일보	재난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 호우 당시 원전 침수 사실 드러낸 <부산일보>
		방송3사	큰 비 피해 이후, 또 호우 주의보 부산지역 방송 3사는 어떻게 보도했나
		방송3사	폭염에 취약계층과 노동자 작업환경 돌아본 지역방송
		지역언론 5개사	연이은 폭우와 태풍에 지역언론은 '원전' '빌딩풍' 주목했다
		부산MBC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지상파 편성권 한계 극복한 <부산MBC> 새로운 방법으로 재난 방송 접근했다
		KBS부산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보건의로 확충 필요성 역학조사관에게 공공의료원까지 폭넓게 짚어본 <KBS부산>
		국제신문	후쿠시마 참사 10주년을 계기로 부산의 원전 안전과 대책을 점검하다

		부산일보, 부산MBC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를 계기로, 부산항 위험물질 관리 현황과 대책 짚어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환경		국제신문	부산 '먹는 물' 문제 꾸준히 추적 보도한 국제신문
		KNN	낙동강의 1987년, 2012년 그리고 2020년 조명한 KNN 가치 전환의 필요성을 말하다
		부산MBC 빅벙커	4대강 사업의 지역성과 현재성 조명을 통해 지금 우리의 문제임을 말하다
		부산일보	80조 구리매장설 소문에 감춰진 폐광산 오염 실태와 시민건강 위협 밝혀내
		국제신문	국제신문 1면에 등장한 해양쓰레기 문제 인터랙티브 기사 통한 공론화 의지 돋보였다
		KNN	양산 사송신도시 건설 현장, 금정산 훼손 고발한 KNN
		KNN	KNN 사송신도시 멸종위기종 보호없이 공사 강행 고발하고 허술한 항만검역, 해수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 꼬집어
		국제신문	부산시민공원 조성 당시 부실 정화 의혹 제기하고 공원 오염토 전수조사 공론화하다
사회 보장		부산일보	부산지역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 감시한 부산일보, 심층 취재 기대한다
		KNN	100년 간 인구 흐름 3D 기법으로 보여준 KNN뉴스아이, 인구 정책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임을 말하다
		부산MBC	부산MBC '부산 체육계 실태' 연속 보도로 만연한 폭력과 비리 구조적 문제점 알려
		국제신문	부산지역 주거빈곤 아동 5만 명에 주목한 국제신문 최저주거기준을 말하다
		부산일보, KNN	2019년 부산*경남 아동학대 신고접수 3,551건 시스템 점검 나선 부산일보와 KNN
역사		부산일보	구술 증언 모아 진실 규명에 다가가다 형제복지원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확산력 더한 <부산일보>
		KBS부산	현대사에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사건 놓치지 않고 현재적 의미 조명한 KBS부산 <뉴스9>
		KBS부산	5*18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의 역사 조명한 KBS부산 <뉴스9>
노동		국제신문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 계기 마련한 국제신문
		부산MBC 빅벙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수익 분배구조 통해 극단적인 경쟁체제와 고용 불안정성 드러낸 부산MBC 빅벙커
		부산MBC 빅벙커	예산 추적에서 출발해 노동자의 삶의 질 주목한 부산MBC <빅벙커>
경제	부동산	KBS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또 고층 개발? 주목 않는 지역언론...계획부터 따져본 KBS부산
	소상공인	국제신문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부산시 연결한, 국제신문 020 보도
		국제신문	부산지역 자영업자 요구 선제적으로 파악해 시 차원의 정책 필요성 제기한 국제신문 신년기획
정치	행정	KBS부산	틀니 시술이 성평등 사업?

		KBS부산	동래구청 신청사 발굴유적 공개 안한다 지적한 KBS부산
		KNN	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금이 엉뚱한 공사에 쓰이는 동안 주민은 암에 걸려 죽어 가는 상황 고발한 KNN
		KBS부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비판하고 원인 분석에 해결책 제시까지, 솔루션 저널리즘 무엇인지 보여준 KBS부산 성 인지 예산 점검 연속 보도
		부산MBC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제도' 부실 운영 실태 고발로 세금만 낭비됐던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내다
		KNN	동백통 운용능력 점검하고 특혜 시비 짚어 부산시민 이용편이에 초점 맞춘 KNN
	선거	부산MBC 빅벙커	부산시장 후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 23조 8,991억 원 재원조달방법과 실현가능성을 짚어보다
		부산MBC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공익보다 사익 추구한 부동산 투자 실태 드러내
	정치인	국제신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다시 챙겨 본 국제신문
		MBC 스트레이트	건설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신문사 사업시스템 점검 통해 구조적 문제로 조명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2020-2021 지역언론탐야보기 '칭찬 비평' 보고서 목록

### 3.2 비판 비평

비판 비평 보고서는 62건이다. 정치 분야 31건, 사회 분야 13건, 경제 분야 12건, 언론 분야 6건이다.

비판 비평 보고서에서 정치 분야는 정치/행정, 정치/선거, 정치/정치인, 정치/갈등으로 분류해 봤다.

정치/행정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박형준 시장 재임 이후, 사업·개발 계획을 비롯한 시정 소식 피상적 보도/받아쓰기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부산시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 쓴 지역언론, '요즈마그룹' 검증에 책임 없을까? △부산시 사업 계획만으로 주요하게 보도, 점검하는 언론 역할은 어디로?가 이를 비판한 대표적인 보고서이다.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 보도의 문제점은 '소더비 부산'의 사례로 본격 수면위로 올라왔다. 8월 23일 부산시가 (주)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 소더비부산(주)과 '소더비부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지역언론 5개사 모두 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며칠 뒤 소더비 홍콩 법인이 부산시와 언론사에 '소더비 부산'이 세계적 경매 브랜드 '소더비'가 아닌 다른 회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하지만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두 지역신문은 이 소식은 기사화하지 않았다. 부산시가 치적 쌓기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업무협약에 대한 비판은 커녕 부산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조차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국제신문은 여전히 '소더비 부산'과 관련한 정보가 8월 23일에 멈춰져 있다. 부산일보는 온라인 기사만 9월 22일에 수정해, 경매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했다. 지역언론의 시정 감시견 역할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보도사례라 할 수 있다.

<p><b>오시리아에 경매 브랜드 '소더비' 진출</b></p> <p>7300평 부지에 2024년 완공 복합 문화·교육 공간 등 조성 MOU 체결, 새 랜드마크 전망</p> <p>부산 해운대구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 '소더비(Sotheby's)'가 진출한다. 소더비코리아가 외자 유치를 통해 1조 원에 달하는 부지를 신탁받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전망이다.</p> <p>부산시립 해운대소더비국제부동산, 소더비자산관리 2곳을 모두 부산시에서 '소더비 부산' 권립을 위한 업무 협조 협약(2023.10.27)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명칭은 부산시립과 단독으로, 소더비(소더비국제부동산 대표, 김구 소더비부산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조한다).</p> <p>소더비는 174년 고서적 경매로 시작해 200여년 연례를 이어온 세계적인 옥션 브랜드로, 경매와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p> <p>소더비코리아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면적 4000㎡(731평) 규모 브랜드 스터dio 부지에 지상 9층 지하 4층, 연면적 7만 2882㎡인 소더비 부산을 건립한다. 브랜드 스터dio 부지는 롯데월드 에드벤처 부산과 스카이다이빙 부지를 접한 부지다.</p> <p>협업 형태의 권립적인 디자인을 완성할 두 팀이 연합한 형태로 소더비 부산은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여기에는 소더비 주선 브랜드를 비롯</p> <p>롯데 스터dio 클러스터, 합계식 자동차 판매 행운인 BMW 소더비의 자동차 스토어 마크, e-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등 복합 문화·교육공간으로 채워진다. 건물 내외부도 해외 유명 건축가들의 설계 없는 디자인을 적용해 상징적인 모습으로 차별화된다. 특히 1000㎡사ized 에디션, 공학기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감각 건축 형태를 조성할 예정이다.</p> <p>박 시장은 "글로벌 최고경영자도 자랑할 오시리아의 모습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소더비 부산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p> <p>최재욱 기자 kjs@naver.com</p>	<p>지면상 정정보고 없고 온라인 기사만 수정</p> <p>소더비-경매 연결 지은 단락 삭제</p>	<p><b>부산일보</b></p> <p>오시리아에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 부산' 진출</p> <p>7300평 부지에 2024년 완공 복합 문화·교육 공간 등 조성 MOU 체결, 새 랜드마크 전망</p> <p>부산 해운대구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 '소더비(Sotheby's)'가 진출한다. 소더비코리아가 외자 유치를 통해 1조 원에 달하는 부지를 신탁받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전망이다.</p> <p>부산시립 해운대소더비국제부동산, 소더비자산관리 2곳을 모두 부산시에서 '소더비 부산' 권립을 위한 업무 협조 협약(2023.10.27)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명칭은 부산시립과 단독으로, 소더비(소더비국제부동산 대표, 김구 소더비부산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조한다).</p> <p>소더비는 174년 고서적 경매로 시작해 200여년 연례를 이어온 세계적인 옥션 브랜드로, 경매와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p> <p>소더비코리아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면적 4000㎡(731평) 규모 브랜드 스터dio 부지에 지상 9층 지하 4층, 연면적 7만 2882㎡인 소더비 부산을 건립한다. 브랜드 스터dio 부지는 롯데월드 에드벤처 부산과 스카이다이빙 부지를 접한 부지다.</p> <p>협업 형태의 권립적인 디자인을 완성할 두 팀이 연합한 형태로 소더비 부산은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여기에는 소더비 주선 브랜드를 비롯</p> <p>롯데 스터dio 클러스터, 합계식 자동차 판매 행운인 BMW 소더비의 자동차 스토어 마크, e-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등 복합 문화·교육공간으로 채워진다. 건물 내외부도 해외 유명 건축가들의 설계 없는 디자인을 적용해 상징적인 모습으로 차별화된다. 특히 1000㎡사ized 에디션, 공학기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감각 건축 형태를 조성할 예정이다.</p> <p>박 시장은 "글로벌 최고경영자도 자랑할 오시리아의 모습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소더비 부산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p> <p>최재욱 기자 kjs@naver.com</p>
------------------------------------------------------------------------------------------------------------------------------------------------------------------------------------------------------------------------------------------------------------------------------------------------------------------------------------------------------------------------------------------------------------------------------------------------------------------------------------------------------------------------------------------------------------------------------------------------------------------------------------------------------------------------------------------------------------------------------------------------------------------------------------------------------------------------------------------------------------------------------------------------------------------------------------------------------------------------------------------------------------------------------------------------------------------------------------------------	---------------------------------------------------------	-------------------------------------------------------------------------------------------------------------------------------------------------------------------------------------------------------------------------------------------------------------------------------------------------------------------------------------------------------------------------------------------------------------------------------------------------------------------------------------------------------------------------------------------------------------------------------------------------------------------------------------------------------------------------------------------------------------------------------------------------------------------------------------------------------------------------------------------------------------------------------------------------------------------------------------------------------------------------------------------------------------------------------------------------------------------------------------------------------------------

△ '소더비부산' 관련 부산일보 지면(좌), 온라인(우) 기사

또 정치분야 비평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게 정치인에 대한 감시 부재다. 2020년 총선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전국적 이슈화가 됐음에도, 지역언론은 피상적 보도 수준에 머물렀다. △정치 권력 감시 등한시하면서 긍정 행보 부각한 지역언론 △전봉민 의원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지역언론 관심 보궐선거 셈법에만 머물러선 안 돼가 대표적이다.

뜯어보기 보고서로 나오진 않았지만, 박형준 부산시장의 방역지침 위반 사건에 대해 지역언론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부산참여연대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낸 성명 '방역지침 위반과 거짓 해명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방역 책임질 수 있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p><b>'방역 위반' 박형준 시민단체 강력 비난</b></p> <p>남양유업 회장 부인 모임 참석 "과태료 처분-진상조사 해야"</p> <p>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방역수칙 위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p> <p>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은 방이 책임자인 부산시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며 "강에서 하는 모임은 공회 모임으로 판단되면 시민들로서는 자중을 명해야 한다. 위급 모임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p> <p>박 시장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삼성구에서 열린 제1차 자사 자리와 관련해 5일 이상 사적모임 수칙을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출석자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문경 고인이 주례한 자리로, 이날 참석자는 14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p> <p>박 시장은 "3월 5일 열린 마르카산 행사에서 이 고인이 역할을 맡아주셨"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처음 출석장에 참석하려 했을 때 '중에 모였'다"고 해명했다.</p> <p>부산참여연장은 "이회장은 처분 불응, 모임 내용까지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양승환 기자 ysw@naver.com</b></p>	 <p>27일 오후 부산 송산문화체육센터 열린 '10 20 민주노동 총파업대회'에서 분란을 초월한 시민 행동규칙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b>최종희 기자 kjs@naver.com</b></p> <p><b>아직 코로나 시국인데... 부산에서도 노동자 1만 명 '함성' 울렸다</b></p> <p>비정규직 철폐-노동법 개정 요구 경찰 "방역법 위반" 수사 착수 내년 대선 앞 정치 부형 양상</p> <p>부산에서도 민주노동 총파업 집회가 열려 1만 명이 함성을 울렸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집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가담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p> <p>20일 오후 1시 30분에 부산 부산진구 송산현 광장은 민주노동 부산본부 소속 노동자 1만 여 명(민주노동 총파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스피커를 직접 쏘고 노동법 개정, 스코리나 9 재선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스코리나 사각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p> <p>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광장 출입구 주변에는 방역 관리 태이워어 설치된 방역띠, 참어사 명부 착용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집회 자체를 방역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집회 시작 전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0 조에 근거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시위를 중립해달라"고 주위 측에 요청했지만, 민주노동 총파업이 이어졌다.</p> <p>광장에서 금지된 집연기도 속출했다. 송산현 광장에서 당파를 피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광장 가장자리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당파를 피는 장면도 포착됐다. 게다가 나선 부산시청 근단 관계자는 "당파를 피지 말고 당파를 드러내는 것"을, 워낙 많은 분란이 보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p> <p>앞가에서는 방역법 위반이면서까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는 11월 전국노동파업, 농민총궐기, 반민대회가 예정되어있고 내년 1월에는 인민총궐기가 예정되어 있다. 이 같은 향후 투쟁 흐름이 내년 3월 대선을 겨냥한다는 항에서 이번 총파업 집회가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부행이라는 것이다.</p> <p>일부 시민들은 확진자 증가세 단락을 전제하면 '워드 코로나' 전황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나타났다. 동아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는 "백신 접종을 할 때라도 라이덴스 확산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가 끝나고 주변 식당이나 사무실로 삼삼오오 모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b>송재욱 기자 kjs@naver.com</b></p>
-----------------------------------------------------------------------------------------------------------------------------------------------------------------------------------------------------------------------------------------------------------------------------------------------------------------------------------------------------------------------------------------------------------------------------------------------------------------------------------------------------------------------------------------------------------------------------------------------------------------------------------------------------------------	-------------------------------------------------------------------------------------------------------------------------------------------------------------------------------------------------------------------------------------------------------------------------------------------------------------------------------------------------------------------------------------------------------------------------------------------------------------------------------------------------------------------------------------------------------------------------------------------------------------------------------------------------------------------------------------------------------------------------------------------------------------------------------------------------------------------------------------------------------------------------------------------------------------------------------------------------------------------------------------------------------------------------------------------------------------------------------------------------------------------------------------------------------------------------------------------------------------------------------------------------------------------------------------------------------------------------------------------------------------------------------------------------------------

△ 부산일보 박형준 시장 방역위반 기사(좌), 1020노동자총파업 방역위반 기사(우)

부산일보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8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 남양유업 회장 부인 '5인 이상' 저녁 자리 참석> 기사를 냈지만, 지면에 실진 않았다. 해당 온라인 기사의 제목은 14인이 참여했다 밝혀진 저녁 식사 자리를 '5인 이상' 저녁 자리 참석이라 축소했다. 이에 반해, 1020노동자총파업 지면기사의 제목은 <아직 코로나 시국인데...부산에서도 노동자 1만 명 '함성 울렸다'>로 '코로나 시국'과 '노동자 1만 명', '함성'을 연결해 부도덕함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일보는 박형준 시장의 방역위반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강력 '비난'했다고 주제를 잡아 기사를 작성했다(부산일보, 8/26, 8면). 주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된 것이다. 특히 박형준 시장의 방역위반 소식은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한데 반해, 1020노동자총파업과 관련해서는 기사가 총파업 현장에서 본 방역위반 사례를 덧붙이거나, '일각에서는'이라는 두루뭉술한 취재원을 등장시켜 방역위반 사안을 더욱 강조했다. 지역신문의 비판의 칼날이 부산시의 행정수장보다 노동자를 향해서 더욱 엄혹했던 것이다.

영역	매체	제목	비평 근거
정치 / 행정	지역언론 5개사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패싱'하는 지역언론	무보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박 시장 임기 첫 날, 지역신문이 주목한 것은?	개발주의 보도
	지역언론 5개사	말 많고 탈 많던 조직개편안 통과됐는데 언론은 조용했고 시민은 궁금하다	사회 갈등 조장
	지역언론 5개사	경찰 수사 결과 무비판 수용한 지역언론, 엘시티 의혹 '용두사미'라 입 모아	피상적 보도/ 받아쓰기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 사업 계획만으로 주요하게 보도, 점검하는 언론 역할은 어디로?	피상적 보도/ 받아쓰기
	지역언론 5개사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간보고서 발표, 희소식으로만 보도할 일 이었나	피상적 보도/ 받아쓰기
	지역언론 5개사	지역언론은 왜 부산시 허술한 행정 묻기보다 입장 대변했나	편파 불공정 보도
	지역언론 5개사	부산미래혁신위 활동 마무리, 지역언론은 어떻게 평가했나	피상적 보도/ 받아쓰기
	부산일보	시정질문은 작게, 박형준 시장 미담은 크게 보도한 부산일보	편파 불공정 보도
	지역언론 5개사	부산시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 쓴 지역언론, '요즈마그룹' 검증에 책임 없을까?	피상적 보도/ 받아쓰기
지역언론	'국정원 불법 사찰' 박형준 시장 연루, 지역언론은 공방보도 말고	무보도	

	5개사	진실규명에 힘 보태라!	
	지역언론 5개사	소더비 부산과 요즈마 펀드로 드러난 업무협약 보도 문제	피상적 보도/ 받아쓰기
정치 / 선거	부산일보 국제신문	선거 끝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여론 불지피는 지역신문	사회 갈등 조장
	지역언론 5개사	4*7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지역언론이 물어본 것은?	경마식 보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선거보도 막 올리면서 정당 오기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신경 써야	오보 및 부정확한 보도 편파 불공정 보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선거 자금에 의혹 제기한 이연주 기자회견, '실언'이라고만 볼 수 있나	축소 보도 가십성 보도 검증 부재
	부산일보 국제신문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2월 첫째 주 보도 어떠했나?	편파 불공정 보도
	방송3사	지역방송이 강조하는 미디어선거, 소수정당*후보는 해당없다?	편파 불공정 중계
	부산일보 국제신문	SNS영향력은 되고 한진중공업 관련 공약은 안 되는 지역언론의 4*7부산시장 보궐선거 기사	본질 흐리기
	지역언론 5개사	양당 경선 이벤트 줄은 2월 선거보도, 유권자 중심 기획 여전히 목 마르다	양당 중심 보도
	지역언론 5개사	지역언론의 소수정당 활용법	편파 불공정 보도
정치 / 정치인	지역언론 5개사	정치 권력 감시 등한시하면서 긍정 행보 부각한 지역언론	무보도
	지역언론 5개사	전봉민 의원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지역언론 관심 보궐선거 셈법에만 머물러선 안 돼	피상적 보도 본질 흐리기
	부산일보	'진보 성추행'이 아니라 '김종철 전 정의당대표 성추행', 부산일보 제목은 이번에도 틀렸다	본질 왜곡
	부산일보	내년 보선 출마예정자 SNS 활동 소개하면서 특정 정치인 유독 부각한 부산일보	편파 불공정 보도
	KBS부산 KNN	언론은 피해자 신상 말고 입장에 주목하라	본질 왜곡
	부산일보	오거돈 시장 사퇴, 부산일보 온라인판 제목 부적절했다	보도 윤리 위반
	부산일보	피해자 호소와 배반되는 보도 쏟아내는 부산일보,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 하지 마라	사회 갈등 조장
	부산일보 국제신문	사퇴 기자회견 이후 경찰 출석까지 언론은 무얼 좇았고 무얼 놓쳤나	본질 왜곡

	부산일보	'안병길 의원은 가방을 하나 둘러메고...'라며 자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 정책투어 소식 유일하게 보도한 부산일보	편파 불공정 보도
정치/갈등	부산일보 국제신문	광복절 기념사가 매 맞을 일인가, 정치인 발언 나열로 정쟁 부각한 지역언론	사회 갈등 조장

△ 2020-2021 지역언론통아보기 '비판 비평' 정치 분야 보고서 목록

사회 분야 비평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이슈는 '노동'이다. 13건의 보고서 중 7건의 보고서가 노동 보도에 대한 비판 비평이었다. 지역현안 노동문제를 축소해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무보도'가 비판비평의 근거였다. 노동자 파업, 투쟁 등은 다루더라도 방송의 경우 단신으로, 신문의 경우 사회면의 사진기사로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자의 파업, 투쟁의 목적이 현안을 알리는데 있다고 볼 때에, 지역언론의 노동소외는 주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노동 이슈를 단신, 사진기사로만 다루는 것은 독자나 시청자에게 노동이슈의 가치가 그 정도의 크기로만 전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소위 '그림이 되겠다' 싶은 장면을 좇아 노동이슈를 기사화 하기 보다는 기자회견, 파업을 통해 공론화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주목해 보도해야 한다.



△ 부산일보 포토뉴스 중 '노동이슈' 관련 기사 갈무리

사회/재난 분야는 지역언론이 좋은 보도를 보여준 분야임에도, 코로나19 초기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화한 보도가 비판 대상이 됐다.

영역	매체	제목	비평 근거
사회 / 노동	지역언론 5개사	구*군 공무원들의 시청 농성, '일 떠넘기기'로만 보도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본질 왜곡
	지역언론 5개사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 복직 투쟁, 지역 언론 관심 저조한 가운데 KBS부산 <뉴스7>은 달랐다	축소 보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김진숙 지도위원 마지막 복직 투쟁, 전국지보다 공론화에 소극적인 지역신문	무보도
	지역언론 5개사	'해고 노동자 복직' 위해 달린 '리멤버 희망버스' 교통체증과 시민불안에 주목한 부산일보	본질 왜곡
	지역언론 5개사	지역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 보도 않는 지역언론, 노동은 지역사안이 아닌가요	무보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반복되는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반복되는 지역언론의 '침묵'	무보도
	지역언론 5개사	불평등과 차별 철폐 위해 거리로 나온 1만 부산 노동자, 방역 위반만 앞세운 지역언론	사회 갈등 조장
사회 / 보장	KNN	창녕 아동 학대 사건 리포트, 자극적 요소 더욱 부각한 연출 과도했다	과장 선정적 보도
	지역언론 5개사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가 핵심 문제라면 지역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보자	피상적 보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부산 KNN	'미 8부두 세균실험실' 문제 국감서 나와도 지역언론 관심 적었다	무보도
사회/역사	부산일보 KNN	41주년 맞은 부마민주항쟁, 지역언론 무엇에 주목했나	피상적 보도
사회/재난	부산일보	의료종사자 중 중국인 간병인만 문제라는 부산일보	오보 및 부정확한 보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국가적 재난 상황, 불필요한 공포 줄이고 해법에 주목해야	과장 선정적 보도

△ 2020-2021 지역언론투아보기 '비판 비평' 사회 분야 보고서 목록

비판 비평 보고서 중 사회 분야 그중에서도 노동 보도의 비평 근거가 '무보도', '축소보도'였는데 반해 경제 분야에서는 편파 불공정 보도가 주로 문제시 됐다. 특히 경제분야 보고서 12건 중 6건이 경제/개발 이슈와 관련이 있었고, 대부분 사업자, 개발자, 행정관료의 입장만을 주요하게 실었다는 점이 비평의 근거가 되었다. 이외에 경제 분야에서는 건설, 부동산, 유통가의 광고홍보성 기사가 비판 받았다.

영역	매체	제목	비평 근거
경제 / 개발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정치권 재추진에 힘쓰는 언론, 돌이킬 수 없는 개발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개발주의 보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 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자 입장 부각한 지역언론	편파 불공정 보도
	지역언론 5개사	인공서핑장 빌미로 해상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힘 실나	개발주의 보도
	국제신문	반려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 등장	개발주의 보도
	국제신문	공공성 부족으로 반려된 해상케이블카, 부산의 미해결 '장기표류 사업'으로 강조한 국제신문	개발주의 보도
	지역언론 5개사	부산시-대원플러스 향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내 최고 전망대' '친환경 개발'만 부각	피상정 보도/ 받아 쓰기
경제/ 건설	국제신문	'엘시티' 성공 자신감이라고? 국제신문의 도 넘은 '포스코 건설' 띄우기	광고홍보성 기사
	부산일보	스카이라인 지키기 위한 용적률 축소 추진, 건설사 입장에서 보도한 부산일보	개발주의 보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코로나19도 못 막은 분양열기'라고? 이것은 광고인가 기사인가	광고홍보성 기사
경제/ 부동산	부산일보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예타 통과, 집값 상승 부추기는 기사 꼭 필요했나	개발주의 보도
	국제신문	부산 시민 주거 안정 흔들리는데 치솟는 부동산 가격만 강조하는 지역언론	피상적 보도
경제/ 유통	부산일보	명품 브랜드 '값질' 비판과 함께 시즌 오프 할인 행사 홍보한 부산일보 1면 머리기사	광고홍보성 기사

△ 2020-2021 지역언론투아보기 '비판 비평' 경제 분야 보고서 목록

마지막으로 언론/미디어 분야 비평 보고서가 6건이었으며 독자위원회, 유착 의혹, 협찬 방송, 신문 광고 윤리 등이 문제시 됐다. 비판 근거는 무보도, 광고홍보성 기사였다.

영역	매체	제목	비판 근거
언론	부산일보	기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다양한 독자 목소리 반영할 수 있을까	언론 자유/독립성 훼손
언론	지역언론 5개사	부산일보 사장-건설사 대표 유착 의혹 보도 않은 지역 언론	무보도
언론	지역언론 5개사	부산일보 사장-건설사 대표 유착의혹 보도 이후, 여전히 아쉽다	무보도
언론	부산 MBC	우려가 현실로...자사 참여사업 호평 일색으로 부각한 부산MBC	광고홍보성 기사
언론	KNN	시청자 기만 이대로는 안 된다 KNN, EBS 등 보험 영업 목적 프로그램 협찬 받아 방송	광고홍보성 기사
언론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부산 보도에 압력 행사한 성명서를 전면광고로 게재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사회 갈등 조장

△ 2020-2021 지역언론투아보기 '비판 비평' 언론/미디어 분야 보고서 목록

## 민주노총 부산본부 10.20 총파업 보도를 중심으로 본 지역 언론의 노동보도 평가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본부부장

### ○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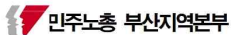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들 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내건 목표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별과 비정규직 철폐,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의 공공성 강화,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 책임제 등이다. 코로나 이후 생존권이 한층 심각해진 사회적 약자들과 직결된 현안들이다.

산재 사망과 중대재해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하루 앞두고 김부겸 총리가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함이었다. 국무총리가 나서 친히 여론을 조작하려는 마당에 어찌 언론만 탓할 수 있겠나. 민주노총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전 세계 평균 옥외 감염률도 0.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했지만 2년 가까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보도한 매체는 거의 없다. 부산시와 풍산 재벌의 결탁으로 노동자들이 11년째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10.20. 총파업 대회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지역 언론들의 양상을 살폈다.

## ○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 관련 보도자료

### -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10/5)



부산 동구 자성로14번길 13 노동복지회관  
전화 837-760 / 팩스 837-761 / 홈페이지 busan.rook.org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 김병준 조직국장(010-4655-7228)

<10월 5일 보도자료>  
**'불평등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  
민주노총이 사회대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10월 6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부산본부(노동복지회관) 앞  
**주최 :** 민주노총부산 총파업 투쟁본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노동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취지**  
- 지금 한국사회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코로나19와 그로인해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위기와 고통의 연속에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가오는 10월 20일 불평등세상을 바꾸기 위해 110만명의 총파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민주노총부산본부 6만5천 조합원도 당일 하루 일을 멈추고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불평등세상을 멈추는 총파업의 3대 정취 목표로 1) 비정규직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2)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보장 3) 주택, 의료, 교육, 돌봄,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제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대회 이후 총파업 의제를 사회전환의 의제로, 대선시기 주요의제로 만들어 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정부당국은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와 기본권을 가로막는 방역정치를 중단하고 총파업대회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집회, 집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자체 방역지침 집회 참가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검사 등을 수립하여 평화적이고 안전한 총파업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시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김병준 조직국장  
○ 발언  
- 총파업전행상황 보고(사회자)  
- 산별(연명) 대표자 결의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  
-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총파업 3대 핵심목표**

**(1)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 비정규직 철폐**  
① 기간제법, 파견법 등 폐지  
② 공공부문비정규직 (차별)철폐 : 임금차별철폐, 공무원 법제화, 지회사·민간취직센터 및 직접고용 등

**■ 노동법 전면개정**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원  
-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11조 미적용 부당해고, 연장·휴일근로가산 수당 등 / 중대해고·입차법일 적용 후 휴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사내직 별근로일  
- 5인 미만 사업장 규모 : 전체 사업체의 60%, 전체 노동자의 18% (350만명)

○ 특고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원  
- 노조권보장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221만명) ■ 간접고용노동자(346만명) 노동자성, 원청교섭권보장

○ 근로기준법 18조 개정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미적용조항 :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 초단시간근로자 규모 (2021년 5월) 156만 3천명

○ 중대해고 근본대책 권원법 개정(중대해고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 교섭장구단일화 폐지, 산별교섭 법제화 등  
○ 근로시간면제연도 폐쇄 노조원입자급여 노사자율원리  
○ 교원공무원 노동권, 정치기본권 보장

**(2)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보장**

○ 기후위기, 디지털전환과 정의로운 산업전환  
- 에너지·자동차·유통산업, 등 산업전환시 노동자 참여, 해고금지, 고용보장 등  
- 기후대응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산업, 대중교통 확대

○ 일자리국가보장  
- 재난시기 해고금지, 구조조정사업장 일자리 국가보장, 고용위기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 기후 일자리 창출,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돌봄일자리 국가책임,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확대

**(3)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 기본생활 권리로서 주택, 의료, 교육, 돌봄의 국가책임 및 무상화 방향  
○ 공공주택 확대, 보육·간병 등 돌봄노동 사회화, 공공의료확대, 대학까지무상교육 등  
○ 재탄환 국민예산 삭감, 부동산분류소득 환수, 코로나19이윤 기업의 법인에 인성과 연계

- 2 -

### - 부산민중행동 출범 및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기자회견(10/13)

### - 총파업 보도자료(10/18)

## ○ 총파업에 대한 10월 20일자 언론보도 내용

매체	제목
오마이뉴스	부산 총파업 1만 노동자 "불평등 끝내자"
프레시안	부산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경찰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뉴스1	민주노총 부산 총파업 1500명 집결..비정규직 철폐 등 촉구
연합뉴스	민주노총, 부산 도심서도 총파업 집회...경찰 "불법에 엄정 대응"
국제신문	민주노총, 전국 14곳서 총파업대회...부산 1500여 명(경찰 추산) "불평등 철폐" 촉구
부산일보	아직 코로나 시국인데... 부산에서도 노동자 1만 명 '함성' 울렸다
더팩트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경찰, "엄정 대응"
KNN	민노총 파업에 일부학교 급식 파행
KBS부산	돌봄·급식 학교공무직 경고파업 "차별 없애라"
부산MBC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경찰 "엄정 대응 방침"

BBS	민주노총 총파업 부산 집회 해산...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겨레	민주노총, 전국서 총파업...거리두기 고려 49명씩 ‘분산시위’도
경향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대회...경찰 “불법행위 가담자 사법처리”
뉴스1	부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1만명 집결...경찰 수사 착수
미디어인뉴스	부산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가담자 엄정하게 사법처리
부산제일경제	코로나 무섭지 않은 민주노총... 부산 도심서 총파업 강행
동아일보	부산도 민주노총 총파업 1만명 동참...경찰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

## ○ 지역 언론의 10.20. 총파업 보도에 대해

### <긍정>

- 다수 매체들이 총파업의 핵심 목표를 나열하거나 대회사 일부 인용
- 제목에서 단체명을 ‘민주노총’으로 표기한 매체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대부분 ‘민주노총’이라는 공식 약칭을 사용

### <부정>

- 총파업의 배경이나 의제 해설보다 경찰의 법적 대응, 경영계의 비판, 시민의 불편 등에 더 많은 지면 할애
- 자극적 제목과 키워드 남발: 극심한 교통 혼잡, 몸싸움, 경찰 수사, 엄정 대응, 사법처리 등으로 부정적 인식 확산
- KNN, KBS부산 등은 ‘학교 급식 중단’을 중심으로 보도
- 2019년부터 경찰은 집회 참가자 인원을 공식 추산하지 않으나 1500명으로 기사화
- 코로나19 확산과 연관 지으려는 프레임: ‘굳이 코로나 시국에..’라는 익명의 인터뷰와 방역당국, 경총, 자영업연대 등 발언 부각(부산제일경제)
- 집회 인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국민 기본권을 억누르는 행태 비판 없음

## ○ 맺으며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와 모순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있다. 살려고 나간 현장에서 매일 7명씩 사람이 죽어 나가지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도 아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지지 못하니 실업자가 늘고 따라서 자영업자도 어려워진다. 폭등하는 집값과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불평등을 해결하자고 광장으로 나온 것이 민주노총이다. 앉아서 죽느니 거리에

서 소리라도 질러보자는 심정으로 뛰쳐 나온 것이다. 그러나 현장 실습생의 사망은 경쟁하듯 앞다투어 보도하던 언론들이, 그 죽음의 사슬을 끊자고 거리로 나온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교통 체증, 시민 불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폄훼하고 비난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 지난 2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높아진 백신 접종률로 인해 코로나는 이제 일상생활이 되었으며 많은 부분에서 방역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 회복은 제한된 생활반경이 넓어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방역을 위해 인내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영역의 권리가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제한되었던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일상으로 가는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회 불평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에 따뜻한 시선과 연대의 마음을 요청드린다.

# 언론의 정당보도와 진보정당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

김동윤 진보당 중앙위원

## 1. 언론의 정당보도

### ①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의 거대 양대 정당 중심의 정당보도

○ 거대 양대 정당 중심보도 <민언련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 보고서>

- 정당별 등장빈도 비교 : 3061건(76.5%)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2251건(73.5%), 미래통합당 2079건(67.9%)으로 10건 중 7건은 거대 양당을 언급한 보도. 정의당 637건(20.8%), 국민의당 330건(10.8%), 민생당 317건(10.4%), 녹색당 117건(3.8%), 민중당 84건(2.7%)
- 선거 국면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을 조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제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실패 - 위성정당
- 이분화된 정치구도를 강화할 위험성

○ 지역언론의 거대 양당 중심보도 <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모니터보고서 2021년 3월 1일~3월 7일>

- 후보 언급은 박형준 후보가 38건, 김영춘 후보가 33건, 박성훈 후보 27건 순. 역시 양당의 후보 언급이 96.2%로 양당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졌음. 노정현 후보 3건, 배준현 후보 1건 .소수정당 후보의 경우 단독 보도는 없었고 각 정당 행보를 전하는 보도에 포함하는데 그침

### ② 언론의 소수정당 보도 양상

○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한 줄 언급 처리

- 다루기는 하지만 깊이 있는 정보까지 보도하지 않음. 거대 양당의 보도 말미에 한 두 줄의 행보 언급. 언론사는 ‘그래도 보도를 하긴 하지 않았느냐’는 항변이 가능하다는 데 맹점
- 소수정당 보도는 ‘옛다 관심’이면 충분

○ 정책과 지향점으로 주목받아도 ‘보도 안 하면 그만

## 2. 진보정당의 ‘직접 민주주의 구현’과 언론보도

### ① 진보당의 직접 민주주의 구현

#### ○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 촛불항쟁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 집약) :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틀을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지향
- 지역사회의 의제를 주민들의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

####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와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합시다’를 위한 주민투표

- 진보당 부산시당과 지역위원회가 주도,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들을 조직(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 부산 \*\*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등 5개 구)
-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세균실험실 폐쇄와 순세계잉여금 사용을 결정”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약 20여만 명 / 5개구 주민투표 평균 1만여명 참가, 투표 주민의 2/3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으로 결정. \*\*구 주민대회 개최

####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와 \*\*구 주민투표와 주민대회 보도

- 부산일보의 8부두 세균무기 반입 사실 확인보도에 이어 부산MBC의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연속 보도'로 이어지고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의 활동 보도가 부각됨
- '순세계 잉여금 주민이 직접 결정', '재난지원금 주민에게 돌려달라', '\*\*구 주민대회 성사' 등 관련 보도가 이어짐

#### ○ 진보당이 지역언론의 관심을 이끄는 방법

-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의제를 발굴
- 진보당 이름을 전면에 내걸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시민사회와 주민조직이 결합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 주민투표와 주민대회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
- 활동에 대한 피상적인 보도 뿐만 아니라 의제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보도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식

## 부산시정 관련 지역언론 보도 평가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I. 부산시정 관련 언론보도

#### 1. 지역화폐 보도

1) 동백전 운영사 탈락한 KT 가처분 기각(부산일보 4.8)

○ 동백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은 운영사 교체로 기존 동백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선불카드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기존 카드는 등록만 하면 연계되는 상황

→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은 만나는 봤는지

→ 이후 기존 카드 연계에 대해 타 언론사와는 달이 보도도 하지 않음

2) 부산경남미래정책 “동백전 운영사 바꾼 부산시 책임져야” (부산일보 4.15)

○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15일 “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서비스를 대부분 중단하게 된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정책은 “부산시는 굳이 1년 만에 운영대행사를 바꿨던 이유에 대해 모든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정책은 “동백전 QR결제, 동백몰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특히 선불카드 강제 발급, 체크카드 신규 발급 중단, 2개 이상 계좌등록 불가 등도 문제”라고 밝혔다.

→ 기존 서비스는 충전, 결제뿐이었으며 동백몰도 11월 이후 런칭

→ 2019년 부산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입찰공고 시 1년 운영계획으로 입찰이 된 상황이었으며 이는 부산지역화폐추진단이 시범사업 후 입찰을 요구하였으나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1년짜리 용역사업 공고를 추진한 결과임. 내용이 많은 것처럼 모든 내용은 밝히라고 한 것은 매우 과장됨

→ 동백전 QR결제는 21.2.25일 동백전 운영대행사 협약 사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CPM, MM 방식 모두 가능한 상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음.

→ 선불카드 강제 발급 이전 협약서 내용에 따라 최초 런칭 시 기존 카드 등록에 관한 내용이 우선 적용, 안내되어 하나, 부산, 농협 카드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연계사용 가능하였고 이후 선불카드 가입에 대한 고지가 진행되었음.

→ 2개 이상 계좌등록 불가는 KT가 운영대행사 진행 시에도 되지 않던 내용이며 결제계좌 등록의 구조상 1개 은행만 등록하는 것으로 이의제기가 불필요한 내용임

3) [단독] 남구 지역화폐 '오륙도 페이' 발행 반년 이용자 절반이 30, 40대...절반의 성공(부산일보 4.21)

→ 중층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을 포함해 지역화폐의 도입 취지와 방향에 관한 공부 부족

4) [속보] 부산 '동백전' 시스템 장애...결제도 충전도 '먹통'(부산일보 6.1)

→ 6월부터 인센티브가 늘어나면서 각 지역 지역화폐 이용자 일시에 폭증에 따른 먹통인데, 같은 날 3건의 같은 기사 먹통이 상황은 문제이고 운영대행사나 부산시의 책임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원인과 대책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이 있고 그 분석하에 해결이 가능한지,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음

5) [기자 수첩]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쏘!(국제신문 4.12)

→ 신규 카드 발급 문제 설명

6) 동백전 옛 카드 사용, 이용자가 선택 가능(국제신문 4.20)

→ 신규 카드 발급 문제 해결 보도

7) QR결제·동백물 연동 안 돼...고객·소상공인 동시 이탈 우려(국제신문 4.20)

○ 부산시와 새 운영대행사 코나아이가 이달부터 동백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전과 다르게 운영하는 일부 부가서비스 탓에 이용자가 혼란을 느낀다. 현재 ▷교통카드 기능 ▷삼성페이 등에 탑재 ▷소득공제 자동 신청 ▷오프라인 충전 기능 ▷동백물 연동 ▷QR결제 기능 ▷동구(이바구페이)·남구(오륙도페이)와 중층 구조 연결 등이 구현하기 힘들거나 지체되고 있다. 불편이 길어지면 이용자 이탈도 우려된다.

→ 지역화폐의 취지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 방식이 더 쉬운 데 부산의 경우 체크카드 방식에 지역화폐를 진행함으로써 2020년에는 원래 지역화폐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운영대행사가 바뀌면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역화폐 구현. 따라서 기존 방식에서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부산시가 미리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운영대행사에 신속하게 대처하게 해야 했지만, 부산시는 그 역할을 못 함

→ 교통카드 기능은 선불카드가 아닌 체크카드에 그 기능이 탑재된 것이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함. 지금 동백전에 그 기능을 엮을 때 일부 인센티브가 시외로 빠져나가게 되어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소득공제, 삼성페이 등도 선불카드 방식이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경우 자동은 아니지만, 신청만 하면 가능한 상황임

→ 동백물이 원래 운영대행사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제3자 기업이 입찰이나 용역 계약 없이 부산시-KT-현대이지웰 3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임. 즉 계약과정과 협상 과정이 모두 쌍방협상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이관절차나 수수료를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연동이 늦게 진행됨

→ 중층 구조는 2020년에도 구현되지 않았고 시민단체, 상인, 운영대행사, 기초지자체에서도 요구했지만, 부산시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

- ⇨ 부산시의 지역화폐 정책 보도의 특징은 1) 지역화폐의 취지와 방향과 관련해 지역화폐 플랫폼의 기술적 이해 부족 2) 1) 몰랐다 하더라도 다방면으로 취재를 했다면 지금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런 보도는 없음. 3) 지역화폐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 기사도 보기 힘들

## 2. 각종 개발 사업

### 1) 재개발

- ① “용적률 추가 10% 상향…지역 정비사업장에 활력”(국제신문 11.3)
- 부산 정비사업 법률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49) 대표변호사에게 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갖는 의미와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3일 들어봤다....박 변호사는 박 시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규제 정비를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의 활성화라는 시정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론이나 경험, 시장의 현실 등 모든 면에서 집값을 잡는 해법은 ‘공급량 확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
- ② ‘키 작은’ 부산 중구…주민센터도 고층 꿈꾼다 區, 가로구역 정비구역 추진(국제신문 7.4)
- ②-1 국제시장·부평동 재개발 ‘물꼬’…난개발·교통 대책 난제(국제신문 7.4)
- ③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속도(국제신문 6.30)
- ④ 부산시, 도시·경관위 내달 통합…재개발·재건축 심의 3개월 단축(국제신문 6.22)
- 부산지역 정비사업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 대표변호사는 “박 시장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시가 통합 위원회 가동이라는 실질적인 조처를 취한 것은 규제를 정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시정 기조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⑤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게…부산시 규제 손본다(국제신문 4. 19)
- 부산지역 정비사업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 대표변호사는 “박 시장 취임과 함께 시가 대대적인 규제 정비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시정 기조가 보인다. 이 같은 시의 움직임은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어 내홍이 깊었던 사업장의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나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집값 잡는 해법은 공급량 확대,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논리를 변호사의 입을 빌려 보도. 기자에 따라 재개발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다른 보도를 보임.
- 박형준 시장의 용적률 상향, 재개발 과정 단축 등에 대해 1, 3, 4, 5는 그 근거인 주거 안정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했을 때의 문제점, 재개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취재는 없음. 시민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 근거자료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평을 내고 있지만 이런 기사는 없음
- 용적률 상향과 재개발 재건축 과정 단축이라는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 불과 몇 개월 전과는 달라

진 이유,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인터뷰이를 활용해 찬성하는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2) 해상케이블카

① 부산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다시 제안·찬반 논란 재점화(부산일보 5.11)

②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이번에는? (종합)(부산일보 5.11)

→ 두 기사 외에 각 단체의 반대를 보도한 기사 6건. 이 두 기사에도 문제점과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일부 싣고 있지만 대부분 반대의 해결 방안이 내용을 채우고 있어 시민이 이 사업에 관한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같은 양과 무게로 보도하고 있지 않음

→ 국제신문은 부산일보보다 더 많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두 신문 모두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등 경제효과가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이유 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거나 사업자로부터 해명을 보도하고 있진 못하다. 또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주차면 수를 늘렸다는 해결책을 아무런 비판 없이 싣고 있어 부산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발표한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다.

## II 박형준 시장 공약 관련 언론보도

### 1. 요즈마 펀드

1) 그룹, 부산특화형 글로벌펀드 운용 불참 (부산일보 4.22)

○ ‘최근 요즈마그룹의 펀드 운용 능력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요즈마그룹이 해당 펀드 운용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 ‘2025년까지 부산에 3,000억 원 규모의 기술특화펀드를 투자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벤처스 출범 협업 및 펀드 운용 참여 외 13일 업무협약의 다른 협약 사항 역시 변함없이 유지될 것

→ 의혹 때문에 운용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의혹에 관한 내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취재를 해야 하지만 그런 기사는 보이지 않음. 그렇다면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고 부산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내용은 없음

→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협약 진행은 타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평가도 없음

→ 민간기업이 하는 사적인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문제가 없는 기업, 투명한 기업이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음

← [데스크 칼럼] 궁금한 것은 요즈마 본사 주소가 아니다(부산일보 8.9) 박 시장은 이제 요즈마에 대한 변명이 아닌 1조 2,000억 원 펀드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부산시민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요즈마 본사의 주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가 아니다. 박 시장이 선거 당시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부산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1조 2,000억 원 펀드’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지, 아니면 당선을 위한 헛공약인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부산일보 칼럼에서 요즈마는 아니지만, 박형준 부산시장의 펀드 조성 계획을 따져 묻는 기사도 있음

## 2. 여성 부시장 공약

1) 여성 부시장 유아 무야(부산일보 4.28)

→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약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음

2) (단독)부산시 여성 특보에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국제신문 6.3)

○ 1급 부시장급, 박형준 시장 '여성 부시장' 공약 의지....구의원-시의원-구청장 거친 여성 분야 전문가 평가

→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약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

3) 부산시 여성 특보에 송숙희 전 구청장(부산일보 6.3)

○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성 부시장 기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캠프 출신 여성 특보를 기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 전 시장의 여성 성추행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로 여성 관련 공약 중 최대공약이었던 여성 부시장 공약을 부산시장이 사과도 없이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문제 제기와 비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부시장 대신 여성 특보 자리를 만들어 임명된 여성 특보에 대해 칭찬까지 하는 어이없는 보도를 하고 있다.

## III 기타

1. “차 타고 내릴 때, 제가 직접 문 여달을게요” (부산일보 4.11)

○ ‘신임 시장님께서서는 직접 차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 기사 내용은 차 문 의전을 안 하는 시장의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칭찬하면서 전임 시장이 차량 의전과 함께 과장, 주무를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차량에 동승시켜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 차 문을 직접 열고 내리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언론 지면에서 시민이 꼭 접해야 하는지 기사인지, 탈권위를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을 탈권위로 보도하는 자체가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각의 기사

## 지역 언론이 외면한 지역이슈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1. 지역 언론의 정체성?

- 지역의 많은 SOC(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 그런데 이러한 SOC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 실익은 누가 가지는 것일까?
- ‘내부식민지(internal colonialism)’론<sup>1)</sup>에 입각하면 지역의 엘리트들(지역유지, 지역 언론인 포함)은 중앙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내부 식민지 관리자?
- ‘지배받는 지배자’(김종영, 2015). 미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엘리트 집단을 구성하는 것처럼, 한국의 지역 엘리트들은 서울 유학생들인 경우가 많음.
- 이들 지역 엘리트들이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연 ‘중앙(서울)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

### 2. (지역) 언론에서 외면 받는 사회적 약자

- 지역사회 사회의 사회적 약자는 ‘이중 약자’일 수 있다. 중앙에서 지역이 소외되고, 그 지역에서마저 소외된다는 의미.
- 소수 정당, 여성, 청년, 장애인, 빈곤층, 노동계, 다문화가정(해외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 등
- 지역 정치인들도 시장, 국회의원 위주로 주요 취재원 활용: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의원/구 의원의 활약에 주목하고, 이들을 중견 정치인으로 키우는 노력이 필요

### 3. 심층(기획) 취재보도의 부족

- 심층(기획) 취재보도를 위해서는 여기에 전념하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데, 지역의 언론시장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구조.
-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전국, 부산)의 지원으로 기획 기사를 만든다.

---

1) 내부식민지 이론(Internal Colonialism)은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는 이론 중의 하나로, 중앙이 지방을 마치 식민지처럼 지배하며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저해하고 자기결정권을 거부함으로써 인해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를 유지, 확대한다는 이론이다. 국내 지역언론은 산업구조, 지배구조, 노동구조, 정책구조 모든 측면에서 내부식민지 이론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담론이 확대되고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언론(특히, 방송) 분야에서는 내부 식민 구조가 견고하게 남아있다. 지역방송은 구조적으로 서울소재 방송사업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방송 정책기구나 중앙 방송사 대표자들 중에서 지방의 인물들은 매우 드물었다. 방송정책이나 방송사 운영에 지방 시청자의 권익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지역방송사의 경우, 최고경영진은 중앙에서 파견되고 하위직은 지역 내에서 충원하는 내부식민지 노동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방송정책의 측면에서도 중앙의 지방 지배라는 종속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대신,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방송의 정책효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장호순, 2015).

- 민간이 지원하는 기획기사는 광고(홍보)성 기사인 경우가 대부분. **native ad**.

#### 4. ‘받아쓰기’ 저널리즘

- 부산시(산하 기관 및 구청)와 부산항만공사 등은 정부기관으로서, 정부 광고의 주체. 이들을 광고주로 인식하는 순간 권력 감시 기능은 순화되는 것이 사실.
- 뉴스시간의 제약 요소가 큰 지역 방송사들은 대부분 시정 홍보 기사,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기사가 많음.

#### 5. LCT 사례 : 위의 제 요소들이 결합한 경우임.

- ‘의혹’보다 ‘의문’에 초점을 둔 기사가 필요함.
- 지역적인 사안보다 전체적인 그림 속에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 그래야 향후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음. 가지치기를 아무리 해봐야 뿌리가 견고하면 새로운 가지가 돌아날 수밖에 없음.
- ‘의혹(suspicion)’과 ‘의문(question)’은 ‘의심(doubt)’이라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가지이며 그 열매도 다르다. 가령 신의 존재에 대해 ‘의혹’을 품은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의문’을 품은 사람은 종교라는 사회현상을 진지하게 성찰할 가능성이 높다. ‘선셋 리미티드’라는 영화에 이 둘을 구분 짓는 명대사가 나온다. “의혹을 갖는 것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요. 의혹은 파괴하고 소멸시키고자 하는 질문이고, 의문은 완전해지고자 하는 욕망이요.” (이상기, <의심의 두 얼굴 ‘의혹’과 ‘의문’>, 부산일보, 미디어비평, 2019.9.29.)

#### 6. 국제뉴스: 지역성의 개념 확장

- 세계화된 시대이자, 해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에 밝아야 한다. 이것은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지역뉴스는 국제뉴스의 비중이 약하다(특히, 지역방송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 서울에서 국제뉴스를 하는 시간대에 지역뉴스를 보도하기 때문).
- 남북문제(통일), 지구온난화(기후변화), 해외 난민문제, 선진 기술 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지역 문제를 바라볼 때, 서울 의존적인 관행을 탈피할 수 있고, 수도권 일극 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
-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접근할 필요. 우물 안 개구리, 틀에 갇힌 시각을 벗어나야 지역의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음.
- 부산이 가장 활발했을 때가 한국 전쟁으로 전국의 인구가 유입됐을 때이며, 동시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 일본 문화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 제2도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음.

#### 7. 지역 혁신 이슈

- 도시 발전 전략(리처드 플로리다,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 3T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
- ‘게이 지수’

▣ 메모